



공정정보도

2011-8호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

(110-140) 서울 중구 수하동 67
/전화398-3620~2/ 팩스398-3630/
발행인 공병설·공보위간사 고흥규

www.newsunion.co.kr

‘대통령 관련기사’ 부실처리 문제 논의 美의회 연설문 의뢰, 내곡동 사저 사전승인

제4기 노사 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는 11월 24일 제8차 회의를 열어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 관련 기사의 일부 부실 처리 문제를 안건으로 올려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청와대가 미국 현지 연설문 작성업체에 큰 돈을 주고 이 대통령의 미 의회 연설문을 작성하는 데 도움을 받은 사실과 관련, 주요 일간지는 이를 비중 있게 다뤘으나 연합뉴스는 뒤늦게 쓰면서 그것도 정부의 해명 위주로 처리했다고 노조 측은 말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결과적으로 현지와 국제국의 판단에 잘못이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초기 취재 결과 ‘무리한 기사’(대행 의뢰자체를 매우 비판적으로 바라본 타 매체 기사)라고 판단했고 어떤 의도를 갖고 쓰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내곡동 사저가 이 대통령의 승인 아래 결정됐다는 김인중 전 청와대 경호처장의 특정 언론 인터뷰 기사를 뒤늦게 따라가면서 빈약하게 처리한 경위도 논의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용 대박’이라고 말해 구설에 오른 정부의 고용 통계를 무비판적으로 전달하는 데 그친 점도 지적됐다.

회의에는 노측에서 공정정보도위원회의 고흥규 간사, 류지복 부간사, 강훈상 총무, 김성진 기자협회 지회장(이상 노측)이 참석하고 사측에서 김성수 편집상무, 이태운 편집국장, 장윤주 국제국장, 김용수 지방국장(이상 사측)이 참석했다. 최태수 기사심의실장은 옵서버로 함께했다.

다음은 회의 주요 내용 요약.

◇ 대통령 미 의회 연설문

■ 노측 =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 가서 연설하고 칭찬을 받았는데 그 초안을 미국의 연설문 작성업체인 ‘웨스트잉라이터스’가 작성했다고 해 논란이 됐다.

이 기사는 11월 6일 저녁 인터넷판에 나왔는데 경향 한국 국민 한겨레 조선 등 조간이 7일자에 받아 썼다. 그러나 연합은 스트레이트는 안 썼고 ‘과거에도 있었던 관례’라는 임태희 대통령실장의 해명만 나갔다.

또 8일엔 워싱턴특파원이 웨스트잉라이터스를 추가 취재해 썼지만 제목부터가 ‘〈웨스트잉라이터스, 빌 클린턴 보좌진들이 주축〉’이다. 이 업체의 인적 진용을 주로 소개하고 말미에 주미 대사관의 해명을 붙였다.

관행이란 임태희 실장 해명을 참여정부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반박했는데 이도 기사로 처리되지 않았다.

■ 사측 = 결과적으로 현지 판단, 국제국 판단에 약간 착오가 있었다. 경위를 보면 세계일보 특파원이 블로그에 게재한 것이 야근 시간대에 확인됐다. 그 야

마는 ‘대통령 연설문을 어떻게 로비업체에 맡겨서 그대로 읽느냐’는 식이었다.

그러나 취재해보니 홍보 대행업체가 아니라 연설문 작성 업체였고, 외국 정상들도 연설할 때 이 업체에 의견을 구한다고 하더라. 대사관도 ‘과거에도 그랬다’고 하고, 청와대도 ‘자문을 구하고 종합해서 최종 연설문이 나왔다’는 설명이었다.

그때 현지 판단은 ‘그럴 수 있다’, ‘무리한 기사 아니냐’는 것이었다. 여러 신문에 게재된 후 실국장 회의에서도 누락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제작부서에서 어떤 의도는 없었다.

신문들 제목대로 쓰면 새로운 오해를 부를 수 있겠다 싶어 후속 취재를 했고 시차는 있지만 다음날 처리했다. 판단에서 실기한 면이 있다.

■ 노측 = 안타깝게도 늦게 송고된 그날 아침 뉴시스 기사가 포털의 톱으로 뜨면서 가장 많이 읽은 기사로 주목을 받았다. 내부 사정을 알 길 없는 독자들에게는 연합뉴스가 일부러 기사를 안 쓴 것 같은 오해를 불렀다.

우리 관심은 의도가 있었느냐가 아니다. 팩트를 전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해야하지 않겠나 싶다. 다른 사안은 빨리 확인해서 기사로 밀어넣어야하지 않느냐 하는데 이런 건 너무 이것저것 많이 재는 것 같다.

◇ 박재완 장관 ‘고용대박’ 발언

■ 노측 =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고용 대박’ 발언이 문제가 됐다. 우리는 스트레이트와 박스 기사가 1건씩, 전형적인 틀대로 나갔다. 그러나 다음날 조간신문은 조선부터 한겨레까지, 그리고 경제지까지 ‘이게 무슨 고용 대박이냐’는 식의 분석기사가 톱기사 수준으로 나갔다.

연합은 너무 기계적으로 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통계치 이면에 대한 분석을 소홀히 해 결과적으로 독자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전한 실책이 있는 것 아닌가.

■ 사측 = 우리는 통신 특성상 아침에 일찍 기사를 내보냈다. 어떤 평가를 받을지 판단하기 어려운 시점이었다. 그때부터 ‘역풍이 불 것’이란 생각을 못하고 드라이하게 내보냈다. 다만 박스에는 ‘고용 서프라이즈를 이끌었지만 내용은 좋지 않다’는 대목이 들어 있다.

제목이라도 ‘고용 대박(?)’하고 물음표라도 붙였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다만 그후에 여당에서 박 장관 발언 때문에 개각해야 한다는 식의 발언 기사도 별도로 나갔다.

■ 노측 = 의도가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박재완 장관이 이렇게 말해

☞ 1면에 이어

서 논란을 빚고 있다거나, 상황 인식이 제대로 된 것이냐고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도 있다는 식으로 별도 기사를 써줬더라면 좋았을 것 같다.

■ 사측 = 남들보다 기사를 앞서 써야하는 통신의 속성도 감안해달라. 예컨대 여야 대결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때까지 상황만으로 판단해서 기사를 써야한다. 신문이야 더 지켜볼 수도 있고 연합이 내보낸 기사를 갖고 추가 취재할 수도 있다. 판단력이 없다가보다 먼저 기사를 써야하는 통신이 짝어질 속명이다.

◇ 김인중 전 경호처장의 신동아 인터뷰

■ 노측 = 우선 송고 시간부터 문제다. 작성부터 송고까지 무려 18시간이 걸렸다. 제목도 완전히 뒤바뀌었다. 김인중 전 청와대 경호처장의 인터뷰 내용도 당초 작성기사로 올라왔던 것이 축약돼 기사 뒤쪽에 붙었다. 설명이 필요하다.

■ 사측 = 신동아 인터뷰가 있다는 얘기가 들려서 청와대팀에서 일단 기사를 올렸다. 그런데 그 내용이 그동안 청와대가 해명했던 것과 똑같았다. 다른 대목은 명의를 아들로 하자는 것, 그리고 경호처장이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만 새로운 내용이었다고 한다.

오히려 해명만 해주는 기사라고 판단해서 내보내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신문에 기사가 나왔다. 토요일이었고, 새로운 내용은 아니지만 오전에 여야 반응이 나오는 대로 공방 기사로 처리할 방침을 세웠다. 그런데 야당은 논평을 냈지만 여당은 얘기가 안 된다고 논평을 안 냈다. 그래서 늦어졌고 결국 민주당 입장을 위주로 기사가 나갔다.

■ 노측 = 청와대 해명과 다른 게 이명박 대통령이 미리 알았다는 점이다. 김인중 처장이 건의했다는 것은 핵심이 아니다. 한국 국민 서울 세계 동아 한겨레가 썼는데 다 제목이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 '대통령이 사저를 오케이했다'는 것이다.

청와대 해명이 뒤집힌 것이다. 그동안 연합 기사는 대통령이 모르는 일이라고 했는데 김인중 기사를 보면 대통령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또 대통령이 사저 부지를 방문했다는 인터뷰 내용도 새로운 팩트였다.

■ 사측 = 대통령이 당연히 알았고, 따라서 대통령 책임이라는, 이런 부분이

청와대에서는 다 나온 얘기였다는 것이다. 또 동아일보의 경우 자기네 잡지인 신동아에 나온 기사임에도 불구하고 토요일자엔 게재하지 않았다. 나중에 월요일자에 쓴 것이다.

■ 노측 = 일반적인 상식으로, 또 청와대 출입기자들이야 그렇게 내부적으로 이해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대외에 기사로 알려진 것은 대통령은 몰랐다는 투였다. 그 점에서 김인중 인터뷰가 기사로서 소재가 되는 것이다.

■ 사측 = 이미 알려진 얘기라고 해서 초기 야간 상황에 늦었고, 그 다음날 오전에 여야 공방으로 묶으려 했지만 안됐다. 상당히 늦어진 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새로운 내용인지는 한 번 평가해봐야 한다.

이달의 참글상

이달의 참글상 대상에 '금융권 탐욕'(증권부) 연속보도

연합뉴스 공정보도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10월 송고분에 대한 이달의 참글상 대상에 증권부의 금융권 탐욕 연속보도를 선정했다.

증권부는 미국 월가의 'occupy 시위'를 계기로 10월 한 달 간 19건의 기사로 국내 금융권의 탐욕 실태를 전방위로 파헤쳤다.

턱없이 높은 금융권의 임원 급여, 주주배당금, 모럴해저드, 성과급 등을 구체적인 자료와 수치를 기반으로 자본권력을 강하게 비판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이로써 증권부는 5월(재벌계열사 일감몰아주기) 올해 두번째로 참글상 대상을 수상했다.

공보위는 또 의정부 미군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불평등한 조항과 실태를 심층보도한 '한미 SOFA 언제까지 쫓불을 들 것인가'(기획취재팀)를 우수상으로 선정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스마트폰용 앱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심의부서를 신설키로 했다는 내용을 포착해 폭로한 '방통심의위, 앱·SNS 심의부서

신설안 마련'(미디어과학부 김병규)은 장려상으로 결정됐다.

